신문사 과학부

崔 靖 民
〈韓國科學기자클럽회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둘이 논쟁을 벌인다.

A : 『야. 이과반의 1~2등 짜리들만이 수두룩하게 모였대.』

B : 『웃기지 마라. 과학기술대학이 뭐라고 1~2등 짜리들이 거기에만 몰리니. 서울대학도 있는데…』

A : 『이런, 소식이 깜깜이군. 신문에 난것을 내 눈으로 읽었단 말야.』

B : 『…?』

이 때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학생 A의 말을 모두 진실로 만들어 주는 보증서인 셈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아직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정치나 데모관계 기사를 빼고는 신문기사=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신문을 제작하는 측에서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보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구속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사실에 가장 근접한 보도를 해야하는 과학담당 기자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 취재대상으로부터 들은 숫자나 인쇄물에 나온 숫자라도 다시한번 더해서 총계 숫자와 맞춰보고 %도 계산기를 두들겨 재확인한 다음에 쓰는것이 과학기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독자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면 틀려있는 경우가 있다.

또 통계의 마술이라고 해서 웃지못할 숫자를 인쇄화하는 경우도 있다. 5, 6년전에 「서울의 20대여성은 2명중 1명꼴로 인공중절수술을 받은 일이 있다」는 기사가 나간 일이 있는데 이는 인공중절을 위해 병원에 찾아온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연령비율을 따져 내놓은 결과를 일반화 시킨데서 온 큰 오보였다.

이런 숫자 놀음 이외에도 기자들이 전문화되어있지 않은데서 생기는 용어 선택이나 논리의 오류도 흔히 볼 수 있다.

기자가 전문화 안되었다는 것은 신문사 내부의 사정으로 독자들은 이를 용인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끔씩 등에 땀이 흐르는 전화를 받게 된다.

신문사 내부의 사정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그 문제를 꺼내 넋두리라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신문사에 과학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숫자가 적다. 우리나라에 과학부가 독립된 부서

로 출발한 것이 1958년 3월. 1957년 스프트니크 위성 발사에 따른 세계적인 과학보도 추세에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지만 현재 과학담당 기자는 1개 신문사에 2~5명 정도다. 이 2~5명이 생명공학에서부터 신소재, 우주, 질병, 원자력, 물리, 화학 등 과학과 기술에 관한 모든 기사와 건강·의학에 관련된 모든 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쓴다고 해도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된다.

독자로서는 「좀 더 많은 기자를 써서 분야별로 전문화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항의를 할수 있겠지만 신문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무작정 많은 사람을 쓸 수 없는 것이 신문사의 내부사정이다.

두번째 내부사정은 자질이 있는 과학기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과학기자는 과학에 통달은 안돼 있드라도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다. 어려서부터 대학졸업때까지 가정에서 못 한개 박아보지 못하고 드라이버 한번 들어보지 않거나 끊어진 전기줄 한번 이어보지 않던 사람은 과학기자로서는 적합치가 않다.

그런데도 신문사 입사시험을 치뤄보면 이과전공의 신청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할 정도다. 2천여명의 지원자중 이과전공은 많아야 1~3명이다. 이들의 시험성적은 거의 1백명이내에 들지 못한다. 신문사마다 다르고 뽑는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1차 합격자는 대개 3배수. 그러니까 이과출신에 대해선 말을 붙여 볼 수도 없게된다.

일단 신문사에 입사한 기자들도 가능 하다면 과학부 근무를 기피한다. 과학부기자란 기자로서의 멋(?)이 적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놓고 토론하고, 경제각료와 국가의 경제운용방향을 토론하는 것이 기자라는 기분을 훨씬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과학기자라는 것을 해봐야 가능하면 기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학자 설득하기, 본인이 얘기한 내용에서 일체의 가감을 하지 말라는 인터뷰 대상 설득하기, 원고부탁을 해봐야 이리빼고 저리빼다가 일반 독자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논문같은 원고를 내놓고 기사가 나간후에도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 기자라는 어떤 꿈을 갖고 신문사에 들어온 기자생리에 이런 것이 맞을리가 없다. 따라서 신문사내 인사이동이 있을 때면 과학기자는 가능하다면 정치·경제·사회부 등 자신을 발산시킬수 있는 부서로 가려고 노력한다.

세번째의 사정은 紙面의 협소다. 어느 신문이든 12면 발행때 절반이 조금 안되는 지면이 광고고, 나머지가 기사면인데 이 자리를 나누어쓰는 부가 8~10개 부서가 되다보니 지면에 경쟁이 붙는다.

실제 각 부서에서 하루에 내놓는 기사량은 최소 20~40면 분량이므로 취사선택이 필요해 지고, 여기서 좀 덜 급박하다고 판단받는 과학기사등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게 된다.

신문이란 중학생에서부터 박사에 이르기까지, 10여세에서부터 80여세까지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독자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사의 취사선택에서는 항시 보편성을 띠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이것이 과학기사의 지면확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확한 과학보도, 소외된 분야까지 살펴서 지면에 반영하는 과학보도가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앞에 설명한 몇가지의 이유나 변명을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과학지면이 항상 신문에서 뒷자리에 물러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첨단기술에 관한 기사가 나갔을 때 그 원전이나 원문을 문의하는 전화(실제로 이런 신문정보에 의해 대기업에서 신기술개발에 참여한 몇가지 사례도 있다), 기사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 어떤 내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문의편지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문과학면은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는 지면이라고 자부할 수도 있다.